

F1 지원법 4월 국회 통과도 물 건너가

문화부 반대·민주 무관심·한나라 외면 경기장 건설비 추경 지원도 어려울 듯

전남도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포틀러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이 여야의 무관심으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F1 경기장 건설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근거법이 없다는 점에서 추경안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F1 지원법을 다룰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를 30일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F1 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4월 임시국회가 30일 폐회된다는 점에서 F1 지원법이 하루만에 국제경기지원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간에 합의만 이뤄진다면 30일 오전, 국제경기지원특위를 개최, F1 지원법을 법사위에 넘겨 이날 오후 본회의에 극적으로 상정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재·보선 직후라는 점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 단 하루만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일, 국제경기지원특위를 열어 F1 지원법을 법사위에 넘긴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F1 지원법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무관심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당초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는 지난 21일 F1 지원법을 법사위에 넘겨 29일이나 30

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4·29 재보선을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F1 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와의 '내전' 등이 겹치면서 F1 지원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전남지역 의원들이 F1 지원법의 국회 통과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F1 지원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물론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F1 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무관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비협조,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F1 경기장 건설을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 지원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에는 F1 경기장 건설 지원비 530억원이 신규 증액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근거법이 없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반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수위원인 조영택 의원은 "근거법이 없다며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한나라당 위원들도 미온적인 태도여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9일 예결위 마지막 심사까지 F1 경기장 건설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1 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경기장 지원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악영향을 주는 등 F1 대회의 성공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에 투자하세요” 세계해외인인무역협회(World-OKTA) 참석자들이 2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시 투자환경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OKTA는 오는 30일 까지 제11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갖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申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전국 법관회의 “법원 권위 실추…징계 청구해야”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전국법관 워크숍 논의결과’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일 열린 ‘전국법관 워크숍’의 논의 결과를 일선 판사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표지를 포함해 A4용지 18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참석자가 이메일 발송이나 개별 재판부 접촉 등 ‘재판 개입’ 논

란을 일으켰던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당시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단순한 비위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를 청구해야 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즉, 윤리위는 법원 권위 실추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없으므로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대법관의 책임 및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약된 의견으로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전제

로 책임을 대해 논하지는 의견과 거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외부에 표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적어도 윤리위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였다는 것이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이라는 점은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관 개인의 거취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대 견해도 표명됐다.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 중인만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어 신 대법관의 책임이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교육·의료·교통·주거 서비스 농어민도 도시민 수준 누린다

8개 분야 30개 항목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의료·교통·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도입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8일 제2차 본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을 포함한 농어업 선진화 과제 12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의결된 과제들에 대해 예산 확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교통, 주거, 건강관리, 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 수준을 가리킨다.

8개 분야 30개 항목이 잠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급한 분야부터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은 앞으로 정부의 각종 농어촌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농어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92년부터 농어업 투융자에 국고 115조6천여억원을 쏟아부어 생산기반 정비나 시설·장비 현대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반성의 결과다. 또 집행 체계를 개편해 집행 과정에서 누수를 막기로 했다.

농어업의 녹색성장 산업화를 위해 바이오매스(녹색연료) 타운을 조성하고 농·산·어촌을 녹색 공간으로 만든

는 사업도 추진된다. 2012년까지 성장이 빠른 바이오매스 타운 90곳 조성, 2020년까지 소수력발전소 24개 건립, 202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 15%로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2018년까지 농·산·어촌 생태관광 인프라 1천47곳 조성, 녹색 식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저탄소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16년까지 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을 500억원으로 확대 등도 추진된다.

쌀, 사과, 돼지, 김 등 주요 품목의 경쟁력을 외국 농축산물과 비교한 결과 등 삶의 질과 관련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 수준을 가리킨다.

후계 농어업인 육성 사업은 자금 융자 지원에 국한됐던 것을 교육, 컨설팅, 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창업 농어업인 육성 사업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 친환경 수로 정비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농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 처리 지원 등도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업선진화위는 잠정 선정된 53개 과제 중 이번엔 의결된 12개 과제 외에 나머지 과제도 논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고 추가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교과부 10개과 없애고 국토부 12개 부서 축소

교육과학기술부가 현 조직에서 10개과(課)를 줄이고 각종 교육개혁 정책과 관련해 제1차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꾼다.

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이 최종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번주 중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70과 9팀(785명)’인 현 체제를 ‘60과 9팀 1단(798명)’으로 개편해 10개 과를 줄이기로 했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

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재조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12개 부서가 축소됐다. 국토해양부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16개 부서(11과 5팀)를 줄이고 4개 부서(3과 1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방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방안에서는 또 항공안전 본부를 없앴다. 항공안전본부는 2001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진 직후 신설됐던 조직으로 이번에 항공정책실로 통합된다. /연합뉴스

경제에 플러스
가족에 플러스
생활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new

- NEW + 1인 가구: 1인 가구 전용 주택, 전용 19㎡, 전용 19㎡, 전용 19㎡
- NEW + 2인 가구: 2인 가구 전용 주택, 전용 24㎡, 전용 24㎡, 전용 24㎡
- NEW + 3인 가구: 3인 가구 전용 주택, 전용 29㎡, 전용 29㎡, 전용 29㎡
- NEW + 4인 가구: 4인 가구 전용 주택, 전용 34㎡, 전용 34㎡, 전용 34㎡
- NEW + 5인 가구: 5인 가구 전용 주택, 전용 39㎡, 전용 39㎡, 전용 39㎡

문의: 1545-7042 www.newplus.go.kr